

ASAN REPORT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과 그 함의

이동규, 강충구, 김지연

2025년 3월



Asan Report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과 그 함의

이동규, 강충구, 김지연

2025년 3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의 견해입니다.

저자

이동규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 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 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대 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 연구위원(2015~2020)을 역임했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강충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김지연

김지연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베이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정치사상) 석사학위를 받았다. 외교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미중관계, 정체성, 종교 및 민족 갈등, 정치폭력 등이다.

목차

요약	06
I. 들어가며	09
II.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안 정책	12
1. 통일-독립 논쟁과 대만의 정치 구도	12
2. 국민당 양안 정책의 특징	14
3. 민진당 양안 정책의 특징	19
III.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 조사	27
1. 대만인 정체성	27
2. 통일-독립 인식	33
3. 양안 경제교류	36
4. 정당 지지도	38
IV. 대만인 인식이 대만 문제에 주는 시사점	41
1. 정당-대만인 간 인식 괴리	41
2. 중국 대만 정책의 이원화	42
V. 정책 제언	47
참고 문헌	49

그림

[그림 1] 대만인의 양안 경제교류 인식	38
[그림 2] 시기별 대만 정당 지지도	39

표

[표 1] 국민당 및 민진당의 양안관계 입장 비교	26
[표 2] 시기별 대만인의 정체성 변화	30
[표 3] 대만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의 변천	32
[표 4] 시기별 대만인의 통일-독립 인식	35

요약

1980년대 대만 민주화 이후 대만 내에서는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대만인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와 COVID-19 팬데믹 사태는 대만인의 반중 정서와 중국 위협 인식을 높였다. 2024년 총통 선거에서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이 승리하고 3연속 집권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입법원 선거에서는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이하 국민당)이 승리하며 국민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확인됐다. 이것은 대만인이 대만 문제를 바라볼 때, 대만인 정체성 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본 리포트는 대만 내부의 관점에서, 즉 대만 정당의 양안 정책과 대만인의 인식을 분석하고 대만의 국내 정치 변화와 대외정책을 전망한다. 이는 대만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장은 1980년대 대만 민주화 이후 대만 정치에서 주요 대립요인으로 작용하는 대만인 정체성과 통일-독립 논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안 정책 특징을 분석한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퇴각한 국민당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진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92 컨센서스(1992 Consensus)¹⁾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만 본토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창당된 민진당은 대만 독립노선과 탈중국화, 대만인 정체성 고양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교역 다변화와 미국의 대중 강경책 편승을 특징으로 하는 양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당과 민진당은 서로 상충되는 양안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것은 어느 당이 대만 집권당이 되는지에 따라 대만의 양안 정책, 더 나아가 대외정책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장은 대만인 정체성, 통일-독립 인식, 양안 경제교류, 정당 지지도를 중심으로 중국-대만 관계와 관련한 대만인의 인식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대만 민주화 이후 대만인 정체성

1. ‘92 컨센서스’는 1992년 11월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가 합의한 것으로 대만과 중국 양측이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을 인정하지만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허용(各自表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정통성 문제를 둘러싼 양안 갈등을 유보하고 양안 교류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계속 증가했지만, 동시에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응답과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대만인 정체성이나 통독 논쟁에서 현실 문제 해결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정당의 양안 정책이 양안관계에 대한 대만 대중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민진당과 국민당이 대만 대중의 필요와 요구보다는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호 차별화된 양안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인 인식 조사 결과는 향후 각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기존의 양안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이것은 중국이 대만 정당과 대만 대중 간의 인식 괴리를 활용해 대만 독립노선을 취하는 민진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당과 대만인을 회유하는 이원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을 시사한다.

본 리포트는 위의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양안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이나 중국의 대만 정책을 관찰하는 동시에 대만 내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대리전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안 정책은 상호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총통 및 입법원 선거에서 대만 내 정치구도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났다. 그런 만큼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정책뿐 아니라 대만 내부의 변화와 향후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민진당 및 국민당과의 비공식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대만 간 학술 교류를 격려해야 한다.

둘째, 대만인 인식과 대만 정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중심의 입장을 세우고 이를 전달해야 한다. 대만 문제가 한국의 국익과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대만해협과 관련된 발언만 해도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를 대만해협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대만도 이에 편승해 대만해협 유사 사태 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요한 해상교통로인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을 야기해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점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현상유지와 양안 경제교류를 선호하는 대만인 인식의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고 강조할 때 이러한 대만인 인식

을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거나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중국의 반발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 과정에서도 이러한 대만인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보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부각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에 집중시켜야 한다.

셋째, 중국의 대대만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에 대한 중국의 회유와 강압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작전(influence operations)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드 사태와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경제 및 인문 교류, 국내 정치의 분열, 중국의 영향력 작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작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양안관계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대만에 대한 회유와 강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례 연구는 한국이 향후 중국의 영향력 작전에 대비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I. 들어가며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대만-중국 간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대만 민주화 이후 '대만인 정체성'이 확산되면서 2024년 1월 총통 선거에서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이 대만 정치사상 최초로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하는 중국은 대만의 독립노선에 반발하며 대만에 대한 외교·경제·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 압박의 일환으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는 물론, 대만과의 외교·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만 문제는 미중 간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발전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한국이 대만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만해협은 한국에게 중요한 해상교통로이기 때문에 한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모색해야 하지만, 대만해협 유사 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안보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한국의 입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자칫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를 부각시켜 동맹인 미국이나 일본, 호주와 같은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과의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한국은 대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익을 위한 원칙과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만 문제가 미중 간의 주요 갈등요인으로 발전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 대만 외부의 시각에서 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1월에 있었던 대만 총통 선거와 입법원(대만 의회) 선거였다. 민진당 후보와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이하 국민당) 후보 중에서 누가 대만 총통에 선출되는지, 혹은 민진당과 국민당 중 어느 당이 입법원 다수당이 되느냐 하는 대만 국내 정치 문제를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미중 대리전'으로 인식하고 접근했다. 표면적으로 민진당이 탈중국화와 독립노선을 추구하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면, 국민당은 중국과의 우호관계와 경제협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만인 정체성 문제도 존재했다. 민주화 이전 대만은 자신을 대만이라 부르기는커녕 '중국'으로 인식했다. 1987년 7월 장징궈(蔣經國) 총통이 38년간 지속된 계엄령을 해제한 후 대만은 1992년 입법원 의원 선거, 1996년 총통 직선제를 거치며 민주화

되었는데, 이 시기 국민당 계엄 당시 빈번했던 외성인(外省人)²의 탄압과 내성인 차별 문제가 논의되면서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대만인 정체성이 발전했다. 대만인 정체성은 대만에 통일-독립 논쟁을 확산시키며 대만 유권자가 민진당과 국민당을 선택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2019년 홍콩 민주화 사태와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대만 내 반중 정서와 중국 위협 인식이 커졌고, 이는 대만인 정체성을 강조해 온 민진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³ 즉, 미중 전략경쟁이 체제 및 가치 경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대만인 정체성은 중국공산당 체제에 대한 반발과 탈중국화를 의미했고, 그런 점에서 대만 총통 선거와 입법원 선거는 대만인이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 중 무엇을 선택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했다.⁴

선거 결과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고 대만 정치사상 최초로 민진당이 3연속 집권에 성공하면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입법원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당이 승리하면서 집권당이 최초로 입법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는 결과가 나타났다.⁵ 대만인이 여전히 국민당을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제3세력인 민중당의 약진도 주목할 만하다. 민진당은 전체 유권자의 30%, 국민당은 25%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⁶ 즉, 민진당과 국민당은 45%의 부동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콘크리트

-
2. 대만에 거주하는 종족집단은 원주민(原住民), 본성인(本省人), 외성인(外省人)으로 구분된다. 원주민이란 한족의 대만개척 이전에 대만에 거주하던 오스트로네시아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이며, 본성인이란 명말 청초 시기인 400여 년 전부터 대만에 이주한 한족의 후손으로 현재 대만인구의 약 85%를 차지한다. 외성인은 1945년 대만이 중화민국에 반환된 이후부터, 1949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갔을 때 같이 이주한 대륙 출신 중국인들과 그들의 후손을 가리킨다. 자세한 내용은 김윤태, <중화 민족주의의 강요와 '대만 정체성'의 형성>, 《동아인문학》 제64집, 2023, p.245를 참고.
 3. 이는 2020년 대만 총통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차이잉원은 2018년 지방 선거 참패로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나면서 2020년 재집권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로 촉발된 반중 정서가 민진당 지지로 이어지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4. 2024년 총통 선거 당시 민진당의 선거 구호는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선택'이었다.
 5. 대만은 1996년 이래로 총통 직접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1996년 국민당의 리덩후이(李登輝), 2000년과 2004년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이, 2008년과 2012년에는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가, 2016년과 2020년에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이 총통에 당선되며 국민당과 민진당이 번갈아 집권에 왔다. 4년 주기인 대만 입법원 선거는 2012년부터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시돼 왔는데, 집권당이 입법원 내 다수당을 차지해 왔다.
 6. 강준영, "대만 대선 결과... 친미 vs 친중 구도에 휘말리지 말자", 아주경제, 2024.1.14., <https://www.ajunews.com/view/20240114133908099>.

지지층을 제외한다면 민진당 라이칭더는 약 10%,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는 약 8%의 부동표를 확보했을 뿐이다. 오히려 부동층만을 본다면 다수의 유권자가 민중당을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만인들이 대만 문제를 바라볼 때 대만인 정체성 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대만 내 대중 불신이 높아지면서 민진당의 정치적 우위가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대만인 정체성 문제 외에도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면, 국민당이 재집권하고 대만의 대외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국민당이나 민진당이 대내 여론을 의식해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대만 문제에 대한 대만인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만의 국내 정치 변화와 대외정책을 전망하는 것은 대만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리포트는 대만인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대만 내부의 관점에서 대만 문제에 접근하고 그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 본 리포트는 2장에서 대만 민주화 이후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안 정책을 살펴보고, 3장에서 정체성, 통일-독립 인식, 양안 경제교류, 정당 지지도 등 대만 문제와 관련된 대만인의 인식을 분석한다. 4장에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그것이 대만 대내외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II.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안 정책

1. 통일-독립 논쟁과 대만의 정치 구도

대만 내 통일-독립 논쟁은 대만 민주화와 연결된다. 국민당은 1940년대 말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퇴각한 후 대만을 본토 수복의 기지로 간주했다. 중국 본토에서 넘어 온 외성인으로 구성된 국민당은 공산당과의 내전을 이유로 전시비상법 체제인 ‘동원감란 시기 임시조례(動員戡亂時期臨時條例, 이하 임시조례)’와 계엄령⁷을 선포하고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국민당은 정치를 독점한 이후 당의 생존과 통치 정통성 확대를 위해 강력하게 경제 발전을 추진했는데, 대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본성인(本省人)의 경제사회력이 강화되었고 이들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와 대만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⁸ 국민당은 대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수용했다. 부자 세습으로 총통직에 오른 장징궈는 임기 말에 야당의 설립을 묵인했고, 그 결과 민진당이 계엄령 해제 전인 1986년도에 본성인 진보인사들을 주축으로 창당되었다. 또한, 그는 1987년 7월 15일에 38년간 지속됐던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등 일련의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고, 본토인의 고향 방문을 허용하는 탐친법(探親法)을 실시하여 양안 교류를 허용했다. 즉, 1980년대 이뤄진 대만의 민주화는 한국과 달리 집권당 내에서 위로부터 진행되었고, 1996년 총통 직접 선거가 시행되면서 격렬하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았던 대만 민주화는 비상계엄 해제 후 10여 년 만에 성공적으로 달성됐다.

대만 민주화와 함께 대만 내에서는 대만인 정체성이 형성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본토 수복, 즉 대륙 중국과의 통일을 목표로 했던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은 본성인에게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강요했고 이것은 대만 내 중국인 정체성 형성과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국

7. 1948년 제정된 임시조례는 총통에게 무제한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안전회의 등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으며, 1949년 발표된 계엄령은 국민당 이외의 정당 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해서는 국민호,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딜레마>, 《현상과 인식》 39권: 3호, 2015, pp.142-143을 참고.

8. 국민호,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딜레마>, 《현상과 인식》 39권: 3호, 2015, p.144.

민당과 그 통치하에 있었던 대만인들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친밀감을 느꼈다. 그들은 혈통,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대만은 대륙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강조했다. 쑨원(孫文), 우보송(吳伯雄), 홍슈주(洪秀柱), 주리룬(朱立倫), 마잉주(馬英九) 등 국민당 당주석들이 모두 중국을 방문했는데, 양안관계를 안정화 시킨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방중 당시 고향 방문과 성묘를 시행함으로써 대만과 대륙 중국이 본래 하나였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당의 일당 독재가 막을 내리고, 이후 계엄통치 시기 외성인의 본성인 탄압과 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외성인-본성인 갈등 문제가 발생했다. 본성인은 외성인에 대한 반발 심리로 중국과는 구별된 대만 민족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대만 내에서 문화재 재지정, 교과과정 개편 등 대만 정체성 강화 운동이 실시되며 대만인 정체성이 확산되었다.⁹ 또한 민진당을 주축으로 하는 대만 정치 엘리트가 ‘자유중국 대 독재중국’의 대립 담론을 구축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만인 정체성을 활용한 것도 대만인 정체성 확산에 기여했다.¹⁰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를 계기로 대만 내에서 양안관계에 대한 정치적 관계가 재설정됐다. 본성인 출신이었던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1991년 임시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내전 상태가 일방적으로 종결된 것이다. 이것은 대만과 중국 본토와의 관계가 기존 ‘합법정부 대 반란집단’에서 ‘정치실체 대 정치실체’의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¹¹ 다음 해인 1992년도에는 대만과 대륙 중국이 합의한 ‘92 컨센서스(1992 Consensus; 九二共識)’가 발표되면서 양안 교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 양측이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은 인정하되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허용(各自表述)하는 92 컨센서스는 양안관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존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정치 실체로서의 대등한 정부 간 공존이냐’는 문제로 양안이 갈등하는 단초를 제공했다.¹² 이것은 ‘대만인 정체성’과 결부되어 대만 내에 통일-독립 논쟁을 확산시켰다.

9. 허석재·김진용, <2022. 정체성 정치의 변화와 지속: 대만 천수이벤 시대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66호, 2014, p.180.

10. 임규섭, <민주화 이후 대만민족주의 변동 및 추이>, 《대만연구》 제21호, pp.31-62.; 김윤태, <중화 민족주의의 강요와 ‘대만 정체성’의 형성>, 《동아인문학》 제64호, 2023, pp.227-256.

11. 김중섭, <리덩후이와 중화민국의 대만화 -헌법 수정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49권, 2010, p.338.

12. 김원곤, <후진타오 체제의 대만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중국학논총》 제25호, 2008, pp.209-210.

대만인 정체성과 통독 논쟁은 대만 정치에서 주요 대립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대만의 정치 구도는 국민당이 친민당(親民黨), 신당(新黨)과 협력하는 ‘범남(泛藍) 진영’과 민진당이 시대역량(時代力量), 대만기진(台灣基進) 정당과 함께 모인 ‘범녹(泛綠) 진영’이 이 슈별로 협력 및 대립하는 구도이다. 통독 논쟁과 관련해 범남 진영은 장기적 통일을, 범녹 진영은 대만 독립노선을 추구하고 있다.¹³ 비록 중국의 부상으로 국민당이 추구하는 대만 중심의 통일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통독에 대한 입장차는 대만과 대륙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국민당과 민진당이 상호 대립적 양안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국민당 양안 정책의 특징

민주화 이후 국민당은 리덩후이(1988~2000)¹⁴와 마잉주(2008~2016) 시기에 대만을 통치했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퇴각했기 때문에 장제스의 국민당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컸다. 그러나 현재 국민당은 민진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92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1) 92 컨센서스

비록 리덩후이는 국민당에 속했지만, 본성인 출신이었던 그는 중국과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임기 말인 1999년에 대만과 중국이 각각 다른 국가라는 ‘양국론(兩國論)’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경제적으로 대만 자본의 대륙 투자를 제한하는 ‘계급용인(戒急用忍: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자)’ 정책과 동남아 투자를 장려하는 남향정책(南向政策) 등을 발표하며 중국과 거리를 두려 했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퇴임 이후 2000년도에 그가 국민당에서 축출되었다는 것을 볼 때 리덩후이 시기의 양안 정책이 국민당의 양안 정책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리덩후이 통치 시기 양안 간 합의된 92 컨센서스는 양안 교류 재개의 물꼬를 틀었다는 점에서 양안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장제스 통치 시기 양안 간 공식관

13. 지은주, 《또 다른 중화, 대만: 대만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연구》, 파주: 김영사, 2015, p.26.

14. 1988년 장징궈 총통이 사망하면서 직무승계로 1988년에서 1990년까지 총통을 지냈고, 1990년과 1995년도 총통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2000년도 그는 국민당에서 축출되었다.

계가 단절되었고 정부 간 교류는 물론, 민간 교류도 금지됐다. 그런 상황에서 1992년 11월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이하 ‘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이하 ‘해기회’)¹⁵가 92 컨센서스에 합의하며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감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후 리덩후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3통(통상·통항·통우) 정책’으로 중국과의 상호 교류의 길을 열었다.

비록 대만 내에서 대만인 정체성이 증가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92 컨센서스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지만, 국민당은 독립 노선을 추구하며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민진당과 달리 자신이 중국과의 우호 관계 및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근거로 여전히 92 컨센서스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나선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는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는 반대하지만 92 컨센서스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국과 ‘양안 서비스 무역협정(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CSSTA)’을 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2 컨센서스는 국민당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국민당은 92 컨센서스를 수용함으로써 중국과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것이 대만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져 대만인 정체성과 반중 정서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우유이 후보는 2023년 9월 미국 방문 기간에 그는 대만 문제 해법으로 92 컨센서스를 언급하지 않고 ‘3D(deterrence, dialogue, de-escalation) 전략’을 제안했는데, 이는 92 컨센서스에 대한 대만 내 반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양안관계와 대만해협의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중국과의 경제교류

리덩후이 총통이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여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나섰다면, 마잉주 총통은 경제적 차원에서 양안관계에 접근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대만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을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극복함으로써 국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15. 1987년 양안 간 최초의 민간 교류가 시작되면서 1990년 11월에 대만의 ‘해기회’가 설립되고, 1991년 12월에는 중국의 ‘해협회’가 설립됐다. 두 기구는 명목상 민간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대만 행정원 소속의 대륙위원회(大陸委員會)와 중국 국무원 소속의 ‘대만사무판공실(臺灣事務辦公室)’이 주도했다. 지만수·이승신·여지나,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07.22., p.2.

대만은 197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정치 민주화 및 통일-독립 논쟁을 거치면서 2000년대에 심각한 경제침체에 직면했다.¹⁶ 대만 민주화 이후 격렬해진 정치세력 간의 입장 차이는 대만 사회의 분열을 야기했고, 이는 정책 수행의 효율성 저하와 경제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이어졌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대만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양안관계의 갈등도 가시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은 개혁개방 이후 발전하는 중국을 자신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다. 즉, 대만은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하여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었다.¹⁷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을 고수하는 중국의 부상으로 대만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외국 자본의 대만 투자도 줄어들었다. 그 결과 2008년 총통 선거 당시 최고의 화두는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였고 마잉주와 국민당은 선거 기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만의 경제침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기반한 경제 성장을 내세운 만큼, 마잉주 시기 국민당의 양안 정책 기조는 뚜렷한 친중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사례는 2010년 6월에 대만과 중국이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經濟合作架構協定;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이다. ECFA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개방과 양안의 투자 보장, 지식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하며, 추후 협상을 통해 FTA를 완성하는 기본 협정의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대만 측의 요구로 2년 내에 관세를 폐지하는 ‘조기수확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이 협상 내용에 포함되었는데, 그 품목 수 및 기대효과 측면에서 대만에게 유리하게 체결되었다.¹⁸ 양안 간 조기수확 리스트 품목 수는 중국이 539개, 대만이 267개로 비대칭적이었지만, 실질 및 평균 관세 삭감율을 반영하면 중국 측이 2.5~5% 삭감 효과인 데 비해 대만 측은 10~15% 삭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⁹

16. 국민호,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딜레마>, 《현상과 인식》 제39권: 3호, 2015, p.165.

17. 이수행·정상은, <1990년대 이후 대만경제의 침체 요인에 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8권: 3호, 2010, p.250.

18. 윤근노, <중국 대만 관계: 양안 ECFA의 정치경제적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34), 2013.11.21., p.7.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GDP와 수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2009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물론 2009년 부진했던 세계 경제가 2010년 빠르게 회복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만 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2010년 10.7%의 경제성장률은 1986년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²⁰ 대만은 ECFA 추진으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 외에도 양안 간의 무역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했다. 대만은 양안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의 암묵적 동의와 ECFA 체결의 긍정적인 효과로 2013년 뉴질랜드와 경제 협력협정(ECA), 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ASTEP)을 각각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²¹

한편, 중국이 대만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경제적 양보를 하면서까지 ECFA를 실현한 것은 정책적 의도가 담긴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조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으로 대만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²² 이에 따라 민진당은 과도한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coercion)과 영향력 확대를 초래한다며 국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교역 다변화를 주장했다.

대만인의 반발도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해바라기(太陽花) 학생 운동’이다.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3주간에 걸쳐 ECFA의 후속 조치인 서비스 무역 분야에 관한 추가개방 협정이 비준됐다. 대만 입법원이 30초 만에 ‘양안서비스무역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 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위원회 심사보고를 통과시키자, 다음 날 새벽 대만 대학생들이 입법원을 기습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24일간의 입법원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고, 나중에는 일반 시민까지 합세해 수십만 명이 가두시위를 하는 등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했다.²³

19. 윤근노, <중국 대만 관계: 양안 ECFA의 정치경제적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34), 2013.11.21., p.8.

20. 김원근, <마잉지우(馬英九) 再選이후 兩岸關係의 變化에 대한 展望>, 《중국학논총》 제36호, 2012, p.89.

21. 이왕휘·박성빈, <대만의 경제안보: 신남향정책과 반도체 사업>,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3호, 2023, p.110.

22. 지은주, <정체성과 경제적 이익의 동학: 2008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2012, p.365.

23. 김민환·정현욱,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과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 《아태연구》 제21권: 제3호, 2014, p.6.

3) 중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

마잉주 총통은 2008년 5월 총통 취임연설에서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不統), 독립을 시도하지 않으며(不獨),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不武)’는 ‘3불정책(三不政策)’을 추진하며 중화민국 헌법하에 대만해협의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⁴ 장제스 집권 시기의 중국과 ‘접촉하지 않고(不接觸), 대화하지 않으며(不談判), 타협하지 않는다(不妥協)’를 의미하는 ‘3불정책’과는 달리, 마잉주의 ‘3불정책’은 양안관계와 대만해협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양안 간 갈등의 소지를 차단한 이후 본격적으로 교류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었다.

마잉주 총통은 취임 이후 먼저 과거 양안 간의 협상창구 역할을 했던 대만의 해기회와 중국의 해협회의 관계를 정상화 시키며 협상 기능 활성화를 통해 양안 교류의 제도화와 법제화를 추진했다.

2008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대만 해기회 이사장인 장빙쿤(江丙坤)과 중국 해협회 회장인 천윈린(陳雲林)을 대표로 한 ‘장천(江陳)회담’이 개최되었고, 양안 교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실무 회담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8년 11월 ‘장천회담’의 성과로 대만과 중국은 양안 간 여객전세기 일일운항 확대 및 직항로 단축, 화물전세기 운항 개시, 해운직항 개시, 우편물 직접왕래 개시 등 항공, 해운, 우편, 식품안전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협력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협정에 합의했다.²⁵ 이로써 양안관계에서 오랜 과제였던 ‘3통’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잉주 정부는 기존의 ‘3통’을 확대 적용한 ‘신3통(新三通, 대3통이라고도 불림)’ 정책을 제시하여 양안 항공기의 직항, 중국인의 대만 관광 및 투자 확대, 인민폐의 대만 내 환전 허용 등을 추진했으며, 중국 교육기관의 학력 인정과 중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정책을 통해 양안 간 교류를 활성화했다.²⁶

양안 간 고위급 및 정상 회담도 개최됐다. 2014년 2월 장즈쥘(張志軍) 중국 국무원 대만

24. “中華民國第12任總統馬英九先生就職演說”, 中華民國總統府, 2008.05.20. <https://www.president.gov.tw/NEWS/12226>.

25. 조준현, <ECFA협정 체결 이후 양안 경제관계의 변화와 대만경제>, 《대만연구》 제 9호, 2016, p.4.

26. 문흥호, <2012년 대만 대선과 마잉주 정부의 대내외정책 전망>, 《국방연구》 제55권: 제1호, 2012, p.142.

판공실 주임과 왕위치(王郁琦)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이 장관급 회담을 가졌고, 이어서 2015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시진핑-마잉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시진핑-마잉주 정상회담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66년 만에 대륙 중국과 대만의 국가 지도자가 만난 회담이었다.²⁷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 회담은 중국이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었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당시 회담에서 주석이나 총서기 등의 호칭 사용을 대만 측에 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잉주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하지 않고 92 컨센서스의 인정만을 요구했다. 이 회담은 양안 협력이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 군사 영역으로 확대되며 양안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국민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이러한 국민당의 중국과의 교류 확대 정책은 민진당의 정책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차이잉원 정부 시기 중국이 민진당의 독립 노선에 반발하며 정부 간 대화를 중단했지만, 차이잉원 정부 역시 해기회-해협회 교류, 행정원 대륙위원회-국무원 대만판공실 간 채널 등을 중단시키며 양안 간의 정치적 접촉과 관계 증진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외에도 차이잉원 정부는 퇴임 후 3년 이상 공직자들의 중국 방문 통제, 대만 공립학교 교사와 교수의 중국 내 학교 정규직 임용 불허, 중국 호적등록 불허 등 인적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3. 민진당 양안 정책의 특징

민진당은 천수이벤(2000~2008)과 차이잉원(2016~2024) 그리고 라이칭더(2024~현재) 시기에 대만을 통치했다.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본성인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창당된 민진당은 유권자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 대만 독립노선과 탈중국화, 대만인 정체성 고양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교역 다변화와 미국의 대중 강경책 편승을 특징으로 하는 양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대만 독립노선과 탈중국화

민진당은 국민당과 달리 대만인 정체성을 중시하며 대만 독립을 모색한다. 그러나 실제로

27. 2005년 4월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와 련잔 국민당 주석 회담 등 양안 간 국민당과 공산당 당대표가 만나는 당 수뇌회담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가원수 간의 회담은 2015년 시진핑-마잉주 회담이 최초였다.

민진당의 독립노선은 중국의 반발로 대만해협 군사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대만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탈중국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 대만 총통으로 당선된 민진당 천수이벤은 리덩후이에 이은 두 번째 본성인 출신 총통이었다. 천수이벤은 대만 민주화의 범위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만 독립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고 ‘대만 독립’을 민주화의 새로운 목표로 정착시키고자 했다.²⁹ 그러나 천수이벤은 국민당의 내부 분열 등에 힘입어 미세한 격차³⁰로 당선된 최초의 야당 출신 총통이었기 때문에 ‘소수총통(少數人總統)’의 한계에 부딪혔고, 그는 임기 내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한 특징의 양안관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다수 대만인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출신의 총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양안관계를 둘러싼 민진당 내부의 파벌 간 의견 차이를 조율해야 하는 모순된 입장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³¹ 이 때문에 천수이벤은 2000년 총통 취임식에서 급진적인 발표를 예상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양안관계 원칙만을 강조하는 ‘사불일몰유(四不一沒有)³²’를 제시했고, 집권 이후 대중 우호 정책과 대만 독립 정책이 혼재된 소위 ‘신중간노선(新中間路線)³³’이라는 모호한 정책을 실행했다.

그러나 천수이벤의 독립 노선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강화되었다. 2002년에 제기한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³⁴’이 대표 사례이다. 이는 모호한 양안 정책이 대중과 민진당 양측 모두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수이벤은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총통 경

28. 이동규, <미중 전략경쟁 시기 대만문제의 쟁점과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1.11.25.

29. 여기서 ‘대만 독립’은 단순히 중국과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넘어, 고유의 영토, 헌법, 국호 등을 갖춘 주권 독립국가를 의미한다. 국민호,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딜레마>, 《현상과 인식》 39권: 3호, 2015, p.152.

30. 선거 결과는 △민진당 천수이벤 후보 39.30% △무소속 송추위(宋楚瑜) 후보(국민당에서 탈당 뒤 출마) 36.84% △국민당 련진(連戰) 후보 23.10%였다. “2000—第10任總統副總統選舉”, 中央選舉委員會 選舉及公投資料庫.

31. 강규영, <대만의 정치리더십과 국가정체성 변화의 상관성 연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논문, 2010, p.161.

32. 중국이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침범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임기 안에 대만은 △독립선언 △국호변경 △헌법에 양국론 삽입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등 네 가지를 하지 않고,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中華民國第十任總統、副總統就職慶祝大會”, 中華民國總統府, 2000.05.20.

33. 詹中原, <新中間路線是突破兩岸僵局的政策指導綱領嗎?>, 國家政策研究基金會, 2007.02.06.

선 당시 약속했던 당정분리의 원칙을 깨고 2002년 민진당 주석직을 겸직하면서 대만 독립 노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³⁵

민진당의 독립노선은 2016년 총통으로 집권한 차이잉원 정부에 들어 더욱 분명해졌다. 8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민진당은 천수이벤 시기와 달리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정당 내부 결속하에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마련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총통 선거 사상 가장 큰 표차로 압승을 거두었으며,³⁶ 동시에 민진당은 입법원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³⁷ 창당 이래 처음으로 다수당으로 등극하며 국정주도의 동력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정부는 대만 독립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대외적으로는 ‘현상유지’라는 모호한 양안관계를 주장하며 92 컨센서스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 표명은 회피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 취임사에서 “1992년 양안의 두 기관이 상호 양보,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치철학으로 소통과 협상을 했고, 몇 가지 공동의 인식과 양해를 이룰 수 있었고, 나(차이잉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³⁸ 여기에서 차이잉원은 “몇 가지 공동의 인식과 양해를 이룰 수 있었다”고 92 컨센서스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인식과 양해”에 대한 구체적 해석은 거부했다. 2020년 1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차이잉원은 “우리(대만)는 우리를 독립국가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 대만은 이미 독립국가이고, 우리는 우리를 중화민국이라고 부른다”고 발언하며³⁹ 대만 독립을 공표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그녀는 92 컨센서스와 ‘하나의 중국’에 대한

34. 2002년 8월 3일 천수이벤은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대만동향연합회의 제29차 연례총회 개막식 화상연설에서 “대만과 중국 양안에는 각자의 국가가 존재하며, 이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臺灣跟對岸中國一邊一國, 要分清楚)”라고 발언했다. “兩岸交流大事紀”, 民國九十一年年報 行政院大陸委員會.

35. 강귀영, <대만의 정치리더십과 국가정체성 변화의 상관성 연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논문, 2010, p.163.

36. 결과는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 56.12%(국민당 후보와 308만여표 차)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후보 31.04% △친민당 송추위(宋楚瑜) 후보 12.83%였다. “2016—第14任總統副總統選舉”, 中央選舉委員會 選舉及公投資料庫.

37. 전체 113석 중 △민진당 68석 △국민당 35석 △시대역량 5석 △친민당 3석 △무당단결연맹 1석 △무소속 1석. “藍線消長 民進黨68席取得國會過半”, 立法院, 2016.01.18.

38. “中華民國第14任總統蔡英文女士就職演說”, 中華民國總統府, 2016.05.20.

39. “China needs to show Taiwan respect, says president,” *BBC*, 2020.01.15., <https://www.bbc.com/news/world-asia-51104246>.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했는데, 이는 대륙 중국과 구별되는 대만의 독립 자주적 지위 확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지만, 대만의 경제, 정치, 안보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양안의 과도한 대립 및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차이잉원은 대내적으로는 탈중국화를 추진하며 양안관계 단절을 위한 법안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1월 15일에 발효된 반침투법(反滲透法)이다. 이 법안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민진당이 제기한 중공대리인법안(中共代理人法案)이 법제화된 것이다.⁴⁰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진당은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의 대만 침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세력영향투명법(境外勢力影響透明法), 반해외적대세력병탄침투법(反境外敵對勢力併吞滲透法), 양안인민관계조례(兩岸人民關係條例) 등을 포함하는 중공대리인법을 발의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반침투법’은 대만의 주권 및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 대만 내 친중국적 인사와 언론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친중 인사 규정의 모호성과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발효되면서 차이잉원 정부와 민진당은 국내법적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 대만인 정체성 고양

국민당의 계엄통치가 끝나고 민주화되면서 대만 내에서는 외성인의 차별과 강압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성인들을 중심으로 대륙 중국과는 차별된 대만 민족 의식이 고양됐다. 민진당은 자신에 대한 대만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선거에 유권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대만인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이후 민진당은 대만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국내 정책이지만, 대륙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진당의 양안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천수이벤은 2002년 ‘일변일국론’을 제기한 이래 대만의 국가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사회문화적 정책을 추진했다. 천수이벤은 향토언어(객가어, 민남어, 원주민어)를 중심으로

40. 여기에서 ‘중공대리인’은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하는 대만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구성한 ‘대만화교육(本土化教育)’⁴¹, 고등학교 역사교육의 탈중국화⁴², 대만의 재외공관, 관공서 및 국공기업의 명칭에서 ‘중화’, ‘중국’을 대만으로 변경하는 ‘정명운동(正名運動)’ 등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2006년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양안의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통일 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 폐지를 선언했다.⁴³

차이잉원 정부 역시 천수이볜 정부의 사회문화적 정책을 이어 받아 대만 고유의 역사문화 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인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차이잉원 정부는 중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화’, 혹은 ‘중화민국’을 대만으로 대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역사교과서 수정을 통해서 교과서 내용을 중화민국적 시각보다 대만의 시각에서 서술했고, ‘중화올림픽위원회’ 명칭을 ‘국가올림픽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또한 대만 본성인들이 사용하는 민난어를 국가언어로 규정한 ‘국가언어발전법’을 제정하여 대만인 정체성을 강화하였다.⁴⁴

그러나 중국과 대만을 구별하고 대만인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대만 내에서 항상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차이잉원 정부 시기인 2018년 11월 대만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중화 타이페이(Chinese Taipei)’ 개명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는데 결국 2020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 대만 선수단이 ‘중화 타이베이’ 대신 ‘대만(Taiwan)’ 이름으로 참가하는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 이것은 대만인 정체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인들이 대만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의식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

민진당은 중국과 대만이 영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에서 비대칭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

41. 林瑞榮,〈我國鄉土教育沿革與發展趨勢〉,《教育資料與研究》第105期, 2012, pp.161-184.

42. “台灣課綱的歷史演變”, 新華澳報, 2017.12.11., <https://www.waou.com.mo/2017/12/11/%E5%8F%B0%E7%81%A3%E8%AA%B2%E7%B6%B1%E7%9A%84%E6%AD%B7%E5%8F%B2%E6%BC%94%E8%AE%8A/>.

43. 문흥호,〈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지속〉,《동아연구》 53권, 2007, pp.227.

44. 신상진,〈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관계의 변화: ‘평화발전’에서 ‘평화통일’로의 이행〉,《중소연구》 43권: 3호, 2019, pp.64.

문에, 양안 간의 경제교류가 대만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그 반작용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민진당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려는 국민당과 달리 대중 경제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성 하에서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천수이벤은 취임 초기인 2001년 8월 리덩후이 전임 총통의 ‘계급용인’ 정책보다 더 개방적인 ‘적극개방, 유효관리(積極開放, 有效管理)’ 정책을 제시하며 그동안 금지되었던 양안 간 직접교역을 허용하고 대중국 투자의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다.⁴⁵ 그러나 독립 노선으로 선화한 2002년부터 그는 높은 대중 의존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아세안(ASEAN)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남향정책을 재추진하며 아세안 전체 또는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FTA를 촉진하는 데 보다 강조점을 두었다.⁴⁶ 천수이벤 정부의 남향정책은 대만 독립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프레임과 중국의 대아세안 전략으로 인해 실패했지만,⁴⁷ 집권 2기에 천수이벤은 ‘적극관리, 유효개방(積極管理, 有效開放)’ 정책을 발표하며 양안 교역을 규제하기 시작했다.⁴⁸

차이잉원 정부 역시 대중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천수이벤의 남향정책을 확대한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을 전면에 내세웠다. 신남향정책은 대만의 전체 수출에서 2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아세안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총 18개국을 대상으로 무역, 투자, 자원, 관광, 문화, 인재 등 전방위 상호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⁴⁹ 이를 통해 대상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 공동체에 편입되어 교역 및 공급망의 다변화를 달성하고자 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중국을 매개로 활용했던 국민당 정부와 달리 직접적으로 국제적인 경제적 연계를 추구하며 양안관계와 상호 대항적인 신남향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제 현실이나 정책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

45. 黃天麟, “兩國三通”, 台灣獨立建國聯盟, 2003.03., <https://wufi.org.tw/%E5%85%A9%E5%9C%8B%E4%B8%89%E9%80%9A>.

46. 윤상우,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의 대만의 대응과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2호, 2010, p.114.

47. 이혁구, <한국과 대만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비교>, 《비교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2019, p.129.

48. “大陸政策與工作 民國95年”, 中華民國大陸委員會, https://www.mac.gov.tw/News_Content.aspx?n=4ACFA38B877F185F&sms=35FA2C4073CF4DFB&s=7C7EDCC652BD09B8.

49. 이혁구, <한국과 대만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비교>, 《비교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2019, pp.118-130.

의지만이 강조된 정책으로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⁵⁰

4) 미국의 대중 강경책 편승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진먼다오(金門島) 포격으로 대표되는 1차 대만해협위기(1954년), 2차 대만해협위기(1958년)를 경험한 국민당이나 대만 독립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침략을 우려하는 민진당은 양안관계에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다.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와 무기 구입을 기반으로 첨단 무기 체제를 구축해 중국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고슴도치 전략’을 추진해 온 것이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해 의무 복무기간을 4개월로 단축한 마잉주 정부도 중국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해 육해공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대만의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미국으로부터 연이어 대규모 무기 판매를 이끌어냈는데, 그 규모만 해도 64억 달러(2010년)⁵¹, 59억 달러(2011년), 18억 3천만 달러(2015년)⁵²에 이른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는 국민당이나 민진당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됨에 따라 대만 독립을 위해 ‘항중(抗中)’을 주창하는 민진당은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편승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과 지위를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 이후 1979년 4월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를 기반으로 대만과의 비공식관계를 유지하고 무기 판매 등 군사 안보적 지원을 해왔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강력한 지렛대로 부상하였다. 2022년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2023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 체결, 트

50. 위홍위·강준영, <차이잉원 정부 집권 1기의 대만주체의식과 양안 현황>, 《대만연구》, 제15-16호, 2020, p.20.

51. “대만, 美무기판매 환영..계속 구매”, 연합뉴스, 2010.01.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099550?sid=104>.

52. “미국,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중국 ‘민감하고 해롭다’ 반발(종합)”, 연합뉴스, 2015.12.17., <https://www.yna.co.kr/view/AKR20151217032751009?input=1195m>.

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무기 판매 등 미국은 차이잉원 정부에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을 강화했고, 2018년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2019년 타이베이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TAIPEI Act)을 통해 대만과의 교류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화도 실시했다.

이렇게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차이잉원 총통 시기에 미국과 대만의 정책적 상호 연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범위도 정치,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⁵³ 게다가, 민진당은 미중 경쟁이 체제 경쟁과 가치 경쟁으로 발전되는 상황을 계기로 대만 문제를 양안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립 문제임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이잉원은 2021년 10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대만의 몰락은 역내 평화와 민주주의 동맹체제에 대재앙이 될 것이며, 현재의 가치경쟁에서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⁵⁴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만을 지원해야 함을 요구했다.

[표 1] 국민당 및 민진당의 양안관계 입장 비교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국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중국' 인정하는 '92 컨센서스' 수용 -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기반한 경제발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안 교류의 제도화 및 법제화 추진 - 양안 간 인적 교류 확대
민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독립노선과 탈중국화 - 미국의 대중 강경책 편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한 교역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국가정체성 및 대만인 정체성 고양 - 대만 내 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

53. 박상현, <미국의 지역적 거대전략과 '대만문제'의 역사적 변화>, 《경제와 사회》 제133호, 2022, p.435.

54. Tsai Ing Wen, "Taiwan and the Fight for Democracy: A Force for Good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Foreign Affairs*, 2021.10.05.,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taiwan/2021-10-05/taiwan-and-fight-democracy>.

Ⅲ.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 조사

2장에서 보았듯이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안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국민당은 '92 컨센서스'와 '하나의 중국'을 수용함으로써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안관계의 안정과 경제 및 인적 교류를 강조한다면, 민진당은 대만인 정체성을 강화하며 대만 독립을 모색하기 위한 탈중국화를 추구하는 한편,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와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어느 당이 대만 집권당이 되는 지에 따라 대만의 양안 정책, 더 나아가 대외정책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만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 선거를 통해서 총통과 입법위원을 선출하는데, 과거 대만 선거에 대한 연구는 대만인 정체성을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⁵⁵ 즉, 대만 민주화 이후 대만인 정체성과 중국 위협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국민당의 정치적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민진당이 대만 정치구도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전망대로 2024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총통으로 선출되었지만, 정작 입법원에서는 국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민진당과 국민당이 상호 견제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는 대만 유권자의 선택에 대만인 정체성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본 장은 대만인 정체성, 통일-독립 인식, 양안 경제교류, 정당 지지도를 분석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대만인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1. 대만인 정체성

대만은 1949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민당 일당 독재 국가였다. 국민당 독재가 지속된 1980년대까지 대다수 대만인은 중국인 정체성, 혹은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 중국인인 동시에 대만인)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89년 대만인 인식 조사에서 당시 대만인 중 52%가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과 대만인 둘 다'라고 한 답은 26%였다. 반면,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한 비율은 16%에 그쳤다.⁵⁶ 그러나 민주

55. 지은주, 《또 다른 중화, 대만: 대만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연구》, 파주: 김영사, 2015, p.78.

56. Chia-lung Lin, "The political formation of Taiwanese nationalism", in Corcuft, ed., *Memories of the Future*, p.222.

화 이후 대만인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대만국립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절반에 가까운 대만인이 스스로를 중국인과 대만인 모두에 해당한다고 답했다([표 2] 참고).⁵⁷ 최초의 총통 직접 선거가 치러진 1996년에는 자신이 중국인과 대만인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율은 49.3%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0년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전까지 정체성에 대한 답변은 자신을 중국인과 대만인을 복수로 택한 답이 40%대 전후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민진당 천수이벤이 총통으로 취임한 2001년부터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2001년 인식 조사에 의하면, 자신을 대만인으로 본 응답자가 최초로 40%를 넘었다. 이 수치는 천수이벤 시기를 지나면서 40% 후반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8년간 집권한 민진당 정부가 대만 독립 문제를 대만 정치의 핵심 의제로 제기하고, 정명 운동, 교과과정 개편, 문화재 재지정 등의 대만 문화 정체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였다.⁵⁸ 동시에 민진당은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대만 민족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활용했다.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을 대만의 적으로 규정하고, ‘자유중국 대 독재중국’이라는 대립 담론을 구축한 것이다.⁵⁹

이후 대만인 정체성은 꾸준히 상승했다. 2008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 국민당 마잉주가 집권에 성공했지만 2009년 조사에 의하면 대만인 정체성은 전체 응답자 중 51.6%로 최초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마잉주 시기 청년층은 2014년 해바라기 학생 운동을 통해서 국민당의 친중 성향에 대한 불만을 분출했는데, 이는 대만인 정체성이 중국 나아가 국민당을 타자화(他者化)한 시각을 확산시킨 결과로 해석된다.⁶⁰

국민당 마잉주 총통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집권했지만, 경제 문제에 가려졌을 뿐 여전히 대만인 정체성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잉주 집권기 대만인 정체성을 택한 응답

57. Election Study Center, “Taiwanese-Chinese identity,”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2024.07.08., <https://esc.nccu.edu.tw/PageDoc/Detail?fid=7800&id=6961>.

58. 허석재·김진용, <정체성 정치의 변화와 지속: 대만 천수이벤 시대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66호, 2022, pp.179-183.

59. 임규섭, <민주화 이후 대만민족주의 변동 및 추이>, 《대만연구》 21호, 2022., pp.43-45; 김윤태, <중화 민족주의의 강요와 ‘대만 정체성’의 형성>, 《동아인문학》 64호, 2023, pp.234-237.

60. 허석재·김진용, <정체성 정치의 변화와 지속: 대만 천수이벤 시대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66호, 2022, pp.169-202.

자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상승했다. 집권 말기 50%대 후반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대만인 정체성은 줄곧 민진당 천수이볜 집권기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언론 독점, 역사 교과과정 개편 등 중국 편향 정책을 추진한 마잉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부상으로 대만 내 불안감이 팽배해진 탓도 있다.⁶¹ 이에 반해, 자신을 중국인으로 본 대만인 비율은 3~4%대였다. 당시 대만인들은 홍콩의 중국 반환 후 악화된 홍콩의 정치, 경제상을 보며 대만인 정체성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 일부는 국민당 계엄령하 ‘백색공포 통치’ 시절을 떠올리며 홍콩을 대만의 미래로 생각했을 것이다.

대만인 정체성 확산은 차이잉원 정부 시기에도 이어졌다. 2017년 55.5%였던 대만인 정체성은 점차 상승해 재선에 도전한 2020년 64.3%를 기록하며 10%포인트가량 증가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양안 갈등이 첨예화되고 무력 시위 등을 포함한 중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대만인 정체성을 택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향은 이후에도 이어지며 2024년 6월에는 64.3%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최근 대만인이 중국인 정체성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인’이란 문화 정체성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 반감을 드러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⁶² 일국 양제를 먼저 경험하고 민주주의 체제가 훼손된 홍콩의 변화를 목격하며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탓이다. 또 언어, 종교 등 문화적으로 중국과 공통 분모가 많지만, 중국이 국적 기반 중국인 정체성을 독점하면서 대만인은 이를 대체하는 다른 정체성을 택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결국, 대만 내 중국인 정체성 감소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감이지 인종 혹은 문화적으로 중국 자체를 부정하고 대만 고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⁶³

이중 정체성, 즉 중국인과 대만인 모두에 해당한다고 답한 비율은 1992년 46.4%에서 등락을 보였지만, 2000년대까지 40%대를 유지했다. 49.3%를 기록한 1996년 이후, 이중

61. 임규섭, <민주화 이후 대만민족주의 변동 및 추이>, 《대만연구》 21호, 2022, p.53.

62. Zhuoran Li, “The Evolution of Identity in Taiwan,” *The Diplomat*, 2023.12.25., <https://thediplomat.com/2023/12/the-evolution-of-identity-in-taiwan/>.

63. Yang Zhong, “Explaining national identity shift in Taiwa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5:99, 2016, pp.4-7.

정체성이 하락한 데에는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⁶⁴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이중 정체성과 대만인 정체성은 천수이볜 정부 말기인 2008년에 역전됐다. 특정 외교안보 이슈에 의해 두 응답치가 교차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대만 내 대만인 정체성을 택한 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였다.

요약하면, 1990년대 이후 중국인 또는 이중 정체성 응답은 하락한 반면에 대만인 정체성은 크게 늘었다. 1992년 17.6%에 불과했던 대만인 정체성은 리덩후이 정부에서 30%대 후반, 천수이볜 정부에서 40%대 후반에 이르며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 기간 각각 약 10% 포인트의 상승폭을 보였다. 이후 마잉주 집권기에도 5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상승했고, 차이잉원 정부에선 그 비율이 60%대 초반까지 상승했다. 이는 그만큼 대만 사회 내 대만인 정체성이 공고해졌다는 근거이다.⁶⁵

[표 2] 시기별 대만인의 정체성 변화 (단위: %)

정부	시기	대만인	중국인	둘 다	모름·무응답
리덩후이	1992년	17.6	25.5	46.4	10.5
	1994년	20.2	26.2	44.6	8.9
	1995년	25.0	20.7	47.0	7.3
	1996년	24.1	17.6	49.3	9.0
	1997년	34.0	19.2	41.4	5.3
	1998년	36.2	16.3	39.6	7.8
	1999년	39.6	12.1	42.5	5.8
	2000년	36.9	12.5	44.1	6.5

64. 1996년 미국이 리덩후이 총통의 코넬 대학교 강연을 위해 비자 발급을 승인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야기됐다. 중국은 미사일 발사, 인민해방군 재배치 등 무력시위를 벌였고, 미국은 대만해협으로 항모전대를 파견하며 대만해협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65. Kathrin Hille, "Becoming Taiwan: in China's shadow, an island asserts its identity," *Financial Times*, 2024.01.05., <https://www.ft.com/content/6e9a0243-87f2-445e-b563-e8f67082b3da>.

정부	시기	대만인	중국인	둘 다	모름·무응답
천수이벤	2001년	41.6	10.6	43.1	4.7
	2002년	41.2	9.2	43.7	5.8
	2003년	42.5	8.3	43.3	5.9
	2004년	41.1	6.2	47.7	5.0
	2005년	45.0	7.2	43.4	4.4
	2006년	44.2	6.3	44.9	4.6
	2007년	43.7	5.4	44.7	6.2
	2008년	48.4	4.0	43.1	4.5
마잉주	2009년	51.6	4.2	39.8	4.4
	2010년	52.7	3.8	39.8	3.7
	2011년	52.2	3.7	40.3	3.9
	2012년	54.3	3.6	38.5	3.6
	2013년	57.1	3.8	35.8	3.3
	2014년	60.6	3.5	32.5	3.5
	2015년	59.5	3.3	33.3	4.0
	2016년	58.2	3.4	34.3	4.1
차이잉원	2017년	55.5	3.7	37.0	3.7
	2018년	54.5	3.6	38.2	3.7
	2019년	58.5	3.3	34.7	3.5
	2020년	64.3	2.6	29.9	3.2
	2021년	62.3	2.8	31.7	3.2
	2022년	63.3	2.5	30.6	3.6
	2023년	62.8	2.5	30.5	4.2
라이칭더	2024년	64.3	3.0	30.4	2.2

2023년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정체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강했다. 대만인 정체성을 택한 비율은 18~34세에서 83%로 35세 이상(61%)에 비해 22%포인트 더 높았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독자적으로 대만인 정체성을 택한 답이 젊은 층에서 더 뚜렷했다. 18~34세는 나머지 응답, 즉 중국인과 대만인(15%), 중

국민(1%)을 합해도 16%에 그쳤다. 또 정서적으로 중국에 가깝다고 느끼는 층이 대만인 정체성을 택한 비율은 85%로 매우 높았다. 흥미롭게도 이는 정파성에 의한 차이보다 컸다. 민진당 지지층 내 대만인 정체성은 29%였고, 국민당 지지층 내 이중 정체성 또는 중국인 정체성은 44%였다.⁶⁶ 이와 같이 현재 대만 청년층 내 대만인 정체성은 다른 세대보다 두드러진다. 그간 대만 정부가 역사교육으로 탈중국화, 대만 주체성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이 현상은 국가가 역사교과서나 기타 이데올로기 도구를 활용해 청년층에 일정한 인식과 가치 체계를 주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대만인의 이중 정체성이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대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대만인 인식조사에서 대만인 정체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의 현상유지 및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이중 정체성이 대만해협 현상유지 및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선호도와 맞물려 국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표 3] 대만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의 변천⁶⁷

정부	시기	내용
국민당	1945~ 1996년	- 중고등학교 역사, 지리교육은 중국문화 정체성 강조 - 대만사 존재하지 않음
리덩후이	1997년~	-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대만사 교과서를 최초 사용 - 대만사를 독립과정으로 최초 편제
	1999년~	- 고등학교 역사교육에서 대만사를 중국사 일부로 삼입 - 대만사가 최초로 독립 단원이 됨
천수이볜	2006년~	- 고등학생, 대만사 교과서를 배움 - 대만사가 최초로 독립된 책이 됨
마잉주	2012년~	- 고등학생, 새 역사교과서로 배움 - 중국사 비중이 늘고 세계사 비중이 감소
차이잉원	2018년~	- 108과강 확장 공포, 이를 적용한 역사교과서를 사용

66. Christine Huang and Kelsey Jo Starr, "Most people in Taiwan see themselves as primarily Taiwanese; few say they're primarily Chinese," *Pew Research Center*, 2024.01.16.,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4/01/16/most-people-in-taiwan-see-themselves-as-primarily-taiwanese-few-say-theyre-primarily-chinese/>.

대만 교육과정의 변천과 대만의 정체성 변화를 살펴보면, 이것들이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덩후이부터 차이잉원 집권기 일련의 교육과정 개편은 대만사 비중을 늘리고 중국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탈중국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내 통일-독립 논쟁으로 비화했다. 따라서, 오랫동안 대만 중심 역사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층의 국가 정체성은 기성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다. 청년층 다수는 대만이 중국이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통일을 지지하지 않았다.

최근 청년층의 선거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이전 대만 청년층 투표율은 총 투표율보다 낮았는데, 2016년과 2020년 총통 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70% 중반이 선거에 참여했다. 대만 중심 역사교육을 통해 정치화된 젊은 층이 선거에 적극 참여했고, 선거에서 '반중-독립' 성향 정당후보의 당선에 기여하는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향후 국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유지될 것이다.

2. 통일-독립 인식

대만 내 통일-독립 논쟁은 외성인-본성인 간 갈등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본성인 출신 리덩후이가 총통으로 취임해 유화책을 펴면서 성적(省籍)에 따른 이분법은 약화됐다. 1990년대 대만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리덩후이 총통은 정권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생명공동체', '신대만인' 등의 개념을 이용해 외성인과 본성인을 모두 대만 민족에 포함시켰다. 대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국민당 계엄통치 시기 형성된 중국 민족의식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⁶⁷ 이에 따라 대만인 정체성이 높아졌고, 통일-독립 인식은 외성인-본성인 갈등을 넘어 중국과 통일을 해야 하는가, 혹은 대륙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양안 간 문제로 발전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리덩후이 집권기 통독 인식은 현상유지(현상유지 추후 결정+무기한 현상유지) 의견이 40% 초반에서 40% 후반으로 가장 많았다. 절반에 가까웠던 현상유지 응답은 소폭 감소했다가 정권 말기 49% 내외가 됐다. 반면, 통일 인식(가능한 빠른 통일+현상유지 원하나 통일 지지)은 20% 내외였다. 가능한 빠른 통일을 원하는 응답은 4%

67. 임규섭, <대만에서 역사교육과 국가정체성의 관계: 청년세대의 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6권: 1호, 2023, pp.84-87. [표 3]은 인용한 논문의 [표 1]과 그에 대한 설명을 저자가 요약한 것이다.

68. 임규섭, <민주화 이후 대만민족주의 변동 및 추이>, 《대만연구》 21호, 2022, pp.40-43.

미만이었고, 현상유지를 원하나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은 15%에서 증가해 2000년 17.4%가 됐다. 흥미로운 결과는 이 시기 특정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응답이 20%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독립(현상유지 원하나 독립 지지+가능한 빠른 독립) 의견도 20%를 넘지 못했다.

2000년대 초 민진당 천수이벤이 총통으로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된 시기에는 현상유지 의견이 최초로 절반을 넘었다(2001년 52.3%). 통일, 독립 중 하나를 택한 의견이 리덩후이 집권기 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에 모름·무응답 의견은 약 7~13%대로 감소했다. 이 시기 감소분은 현상유지 의견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상유지 의견은 천수이벤 집권기 말기, 50% 후반까지 상승하며 대만인 사이 현상유지 의견은 늘었다. 이후 정권교체 직전인 2008년, 현상유지 의견은 57.3%에 이르렀다.

위 경향은 국민당 마잉주가 취임한 2009년 이후에도 이어졌다. 나아가 통일과 독립 가운데 한 의견을 택한 응답이 줄면서 현상유지 의견은 60% 내외가 됐다. 2009년 최초로 60%를 넘긴 현상유지 의견은 마잉주 2기에 감소했지만 50% 후반을 기록했다. 이는 대만 내 현상유지 의견이 포화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현상유지 의견 중에선 현상유지를 하다가 추후에 결정하자는 답이 35% 내외로 가장 많았다. 무기한 현상유지 의견은 25% 내외였다. 통일을 원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원하는 답은 독립을 약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민진당 차이잉원은 대만인 정체성, 민주주의, 자유가치를 강조하며 중국과 차별화했고,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안도 거부했다. 차이잉원 재선에 기여한 홍콩송환법 반대 시위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2020년에 독립 지지 인식은 32.4%로 30%대를 최초로 돌파했고, 2021년에도 30%대를 넘었다(31.1%). 그러나 이 수치는 현상유지를 원하지만 독립을 지지하는 수치를 포함한 것이다. 가능한 빠른 독립을 선택한 응답은 6%대를 유지했다. 이는 심리적으로는 독립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지만, 현실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택하는 응답자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표 4] 시기별 대만인의 통일-독립 인식⁶⁹ (단위: %)

시기	가능한 빠른 통일	현상유지 원하나 통일 지지	현상유지 추후 결정	무기한 현상유지	현상유지 원하나 독립 지지	가능한 빠른 독립	모름·무응답
1994년	4.4	15.6	38.5	9.8	8.0	3.1	20.5
1995년	2.3	19.4	24.8	15.6	8.1	3.5	26.3
1996년	2.5	19.5	30.5	15.3	9.5	4.1	18.6
1997년	3.2	17.3	30.5	16.3	11.5	5.7	15.4
1998년	2.1	15.9	30.3	15.9	11.5	5.7	18.7
1999년	2.2	15.2	30.9	18.8	13.6	4.7	14.5
2000년	2.0	17.4	29.5	19.2	11.6	3.1	17.3
2001년	2.8	17.5	35.9	16.4	10.5	3.7	13.3
2002년	2.5	15.7	36.2	15.0	13.8	4.3	12.4
2003년	1.8	11.9	35.0	18.0	14.5	6.2	12.5
2004년	1.5	10.6	36.5	20.9	15.2	4.4	11.0
2005년	1.8	12.3	37.3	19.9	14.2	6.1	8.5
2006년	2.0	12.1	38.7	19.9	13.8	5.6	7.9
2007년	1.9	10.0	36.8	18.4	13.7	7.8	11.4
2008년	1.5	8.7	35.8	21.5	16.0	7.1	9.4
2009년	1.3	8.5	35.1	26.2	15.0	5.8	8.1
2010년	1.2	9.0	35.9	25.4	16.2	6.2	6.1
2011년	1.5	8.8	33.8	27.4	15.6	4.6	8.2
2012년	1.7	8.7	33.9	27.7	15.1	4.8	8.1
2013년	1.9	9.2	32.6	26.3	17.2	5.7	7.2
2014년	1.3	7.9	34.3	25.2	18.0	5.9	7.3
2015년	1.5	8.1	34.0	25.4	17.9	4.3	8.8
2016년	1.7	8.5	33.3	26.1	18.3	4.6	7.4
2017년	2.3	10.1	33.1	25.3	17.2	5.1	6.9
2018년	3.1	12.8	33.4	24.0	15.1	5.0	6.6
2019년	1.4	7.5	29.8	27.8	21.8	5.1	6.5
2020년	1.0	5.6	28.8	25.5	25.8	6.6	6.8
2021년	1.4	6.0	28.4	27.3	25.1	6.0	5.8
2022년	1.3	5.9	27.7	29.4	24.4	5.2	6.0
2023년	1.2	6.2	27.9	33.2	21.5	3.8	6.2
2024년	1.1	5.5	27.3	33.6	22.4	3.8	6.3

요약하면, 현상유지 의견은 통일-독립 인식을 조사한 1994년 이래 줄곧 다수를 차지했다. 통일, 독립을 지지한 답은 각각 20%, 10%에서 2024년 6%대로 크게 감소했다. 이 경향은 같은 기간 증가한 대만인 정체성을 고려하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중국인과 차별화하기 위해 대만인 정체성을 택한 것이라면 독립에 대한 지지 의견이 늘어야 했다. 그러나 복잡한 대만의 정치, 경제 상황과 격화된 양안관계를 고려하면 통일과 독립 가운데 특정 의견을 택한 층이 줄고 현상유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대만인은 중국 체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통일을 원치 않았고, 독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셈이다. 2020년 친중-통일 지지성향 국민당이 일국양제를 거부한다고 밝힌 후에도 이같은 경향이 강화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대만인의 통독 인식이 주변 정세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양안관계에 기초한 구조적 변화라는 점을 보여준다.

1945년 2차 대전 후 중국과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내 현상유지 여론이 증가했는데, 이는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통일보다 내재적으로 독립을 선호하는 인식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분단 장기화로 인한 민족의식 퇴조, 2000년대 이후 민진당 정부의 대만 중심 역사교육, 중국의 압박정책에 대한 반발, 미국의 자유민주 가치에 대한 선호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⁷⁰ 그런 점에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하는 한 대만 내에서 탈중국화 인식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양안 경제교류

[그림 1]에서 보듯이, 양안 경제교류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이래 양안 경제교류의 속도가 적당하다고 본 비율이 40% 내외로 가장 많았다. 이 응답은 차이잉원 집권 초기인 2018년 11월 33%까지 하락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지난 10년 간 대체로 40% 안팎을 기록했다. 대만인 정체성 인식과 달리, 양안 경제교류의 속도에 대해서 중립을 택한 응답이 지속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69. Election Study Center, “Taiwanese-Chinese identity,”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2024.07.08., <https://esc.nccu.edu.tw/PageDoc/Detail?fid=7801&id=6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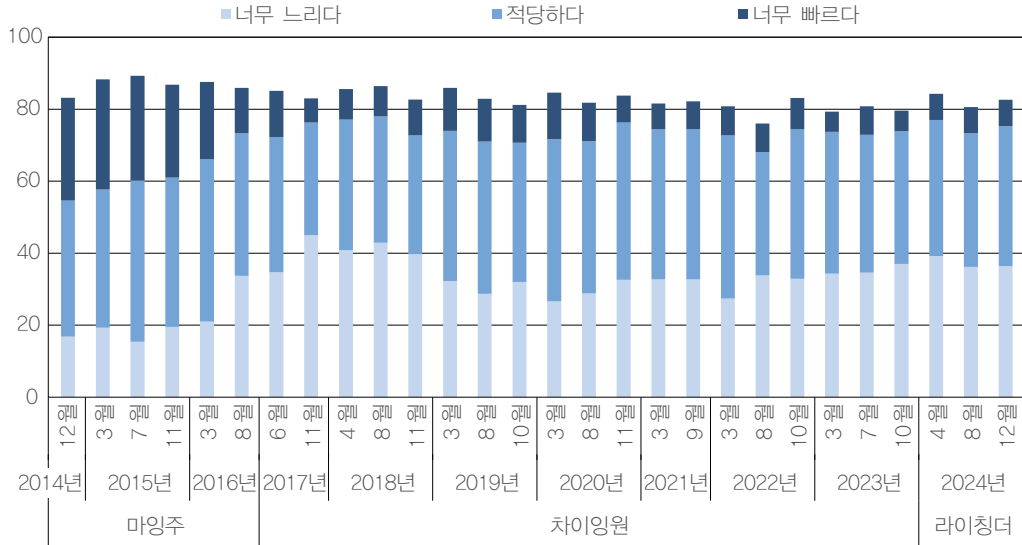
70. 이광수, <중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만인의 인식>, 《지식융합연구》 5권: 2호, 2022, pp.298-304.

대만인의 양안 경제교류 인식은 정권별로 다소 차이가 났다. 집권당의 대중 정책 변화가 대만인 인식에 영향을 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친중 성향 마잉주 집권기인 2014~2016년에는 양안 교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응답이 30% 내외였다. 이 수치는 2016년 8월 12.6%까지 줄었지만, 2015년 3월에는 30.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20% 이상이 꾸준히 양안 간 교류가 너무 빠르다고 봤다. 이에 2013년 6월 체결된 양안 서비스무역 협정에 대한 반감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이를 비민주적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젊은 층 주도의 해바라기 학생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반중 성향 차이잉원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라이칭더가 연이어 집권한 시기에는 양안 교류 속도를 너무 느리다고 본 비율이 크게 늘었다. 마잉주 집권 말기 33.7%까지 상승하긴 했지만, 대체로 20% 안팎에 머물렀던 이 수치는 차이잉원 집권 초기 40%대를 넘었다. 2017년 11월 45%로 최초로 40%대를 돌파한 이 비율은 2018년 11월까지 40% 내외를 유지했다. 물론 2019년 3월 이후에는 30% 초반, 적게는 20% 후반까지 하락했지만 차이잉원 집권 말기 2023년 10월 37%로 상승했다. 이 추세는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되며 민진당 정부가 지속된 2024년에도 이어졌다. 2024년 4월 39.2%, 8월 36.2%, 12월 36.4%로 양안 교류 속도를 적당하다고 본 비율에 근접했다.

이 수치는 표면적으로는 민진당 집권기에 대만인 정체성과 독립 지지 여론이 증가된 상황과 모순적이다. 탈중국화를 추구한다면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대만에 대한 중국 영향력 확대로 인식하고 대중 경제의존도를 축소하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안 경제교류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정치적으로 친중 노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이 겪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접근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⁷¹ 즉, 중국이 대만의 최대 수출입 교역국인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71. Howard Shen, "Taiwan's Surprising Drop in Trade Dependence on Mainland China," *The Diplomat*, 2024.03.08., <https://thediplomat.com/2024/03/taiwans-surprising-drop-in-trade-dependence-on-mainland-china/>.

[그림 1] 대만인의 양안 경제교류 인식⁷² (단위: %)

4. 정당 지지도

[그림 2]에서 보듯이, 1992년부터 추적한 시계열 자료에 따른 대만 정당 지지도에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무당파(independent)가 40%대 내외로 다수를 차지했다. 모름·무응답을 포함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꽤 높았다. 둘째, 2020년 출범한 민중당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며 2024년에 15.5%를 기록했다. 이로써 민중당은 2000년대 초 친민당(2001~2003년 15.8%, 14.4%, 11.6%)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도를 얻은 정당이 됐다. 셋째, 국민당과 민진당 지지도는 각각 장기간 하락, 상승세를 보였다.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2010년대 중반에 교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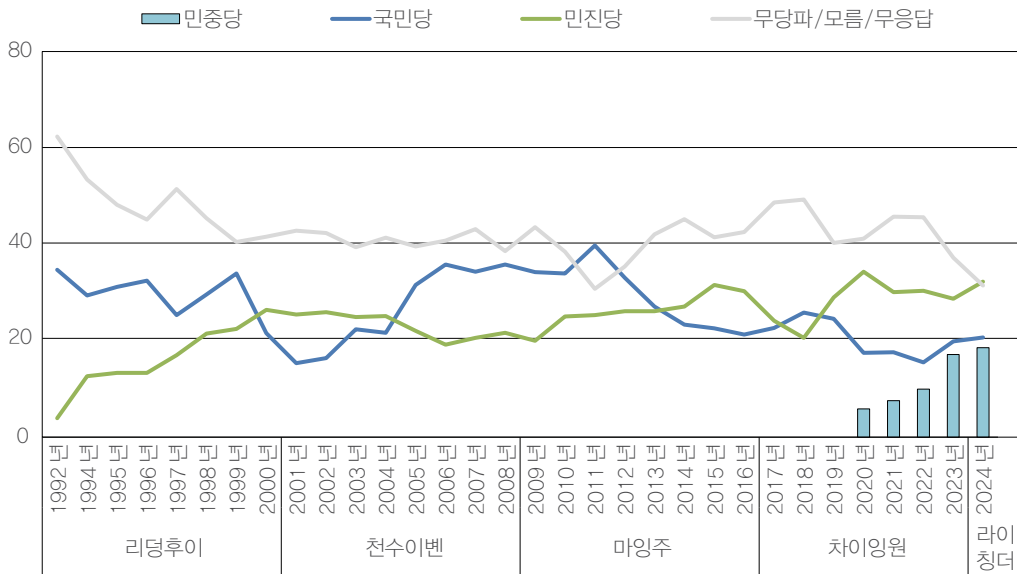
먼저 역대 대만 총통선거, 입법원 선거 투표율과 양대 정당 및 각 후보의 득표율을 고려했을 때 상당수의 무당파는 민진당과 국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투표율은 입법원 선거 58~75%, 총통 선거 66~82%로 차이를 보였으나, 양대 정당 득표율이 3당 후보나 3당이 선거에서 선전한 몇몇 시기를 제외하면 70~80%로 높았다. 정권교체에 따라 무당파가 선

72. Mainland Affairs Council, "Public's view on current Cross-strait relations," *Mainland Affairs Council*, 2024.12.05., <https://www.mac.gov.tw/en/cp.aspx?n=7356E62A20738207>.

거에서 양대 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즉 평소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다가, 선거 때는 국민당 또는 민진당에 투표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20년 이래 제3당 민중당 지지율이 급등했다.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민중당 커원저(柯文哲)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타이페이 시장을 거쳐 총통선거에 출마하며 인지도가 높았으며, SNS를 적극 활용해 젊은 유권자층을 공략한 총통선거 전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적인 면에서 민중당은 대만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균열 축인 통일-독립, 대만인 정체성 등에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현 정치제도를 유지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중국과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대만 GDP의 3%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에서도 대만 산업의 내재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⁷³

[그림 2] 시기별 대만 정당 지지도⁷⁴ (단위: %)



73. 지은주, <대만 2023: 상존하는 양안 위기와 2024년 총통 선거의 준비>, 《아세아연구》 67권: 1호, 2023, pp.87-90.

74. Election Study Center, "Taiwanese-Chinese identity,"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2024.07.08., <https://esc.nccu.edu.tw/PageDoc/Detail?fid=7802&id=6964>. 최근 대만 정당 지지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림 2]에는 민중당을 제외한 제3당 지지도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대만인 정체성이나 통독 인식에 따라 지지 정당을 정하고 투표하는 전통적 정치 경향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⁷⁵ 즉, 향후 대만 정치 구도에서 경제, 불평등 등 국내 정책 이슈가 대만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당과 민진당은 대만인 정체성, 통독 인식에 기반해 선거에서 경쟁해 왔다. 일례로, 2024년 총통 선거 기간 국민당은 ‘전쟁 대 평화’ 슬로건을 내세워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와 경제교류를 강조했고, 민진당은 ‘민주주의 대 독재’ 슬로건을 내세워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 했다.

그러나 젊은 유권자층은 양대 정당보다 덜 이념적이고 현실 문제 해결을 내세운 민중당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⁷⁶ 이는 대만 내에서 대만인 정체성이나 정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한 통일-독립 논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해협의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삶과 직결된 노동, 소득, 주거 등 경제문제 해결에 대만인이 주목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⁷⁷

75. Ho-Chun Herbert Chang, and Sunny Fang, “Identity Collapse? Realignment of Taiwanese Voters in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s on Social Media,” *Computers and Society*, 2023.10.10., <https://arxiv.org/abs/2310.07739>.

76. Eric Cheung, “As election nears in Taiwan, many young voters say China isn’t their biggest concern,” *CNN*, 2024.01.10., <https://edition.cnn.com/2024/01/10/asia/taiwan-election-young-voters-china-intl-hnk/index.html>.

77. Simina Mistreanu, and Johnson Lai, “A non-traditional candidate resonates with Taiwan’s youth ahead of Saturday’s presidential election,” *AP*, 2024.01.12., <https://apnews.com/article/taiwan-youth-ko-lai-hou-de6685d9addf7815703250e7245ec9e5>.

IV. 대만인 인식이 대만 문제에 주는 시사점

1. 정당-대만인 간 인식 괴리

대만인 정체성, 통일-독립 인식, 양안 경제교류, 정당 지지도를 중심으로 대만 문제와 관련한 대만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대만 민주화 이후 중국인 정체성은 감소해 2~3%를 유지하는 반면, 대만인 정체성은 계속 증가해 2020년 이후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신을 대만인과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이중 정체성은 30%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대만 대중들이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중국에 복속되지 않은 대만을 선호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대만인 정체성은 대만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탈중국화와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민진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통일-독립 인식과 양안 경제교류는 대만인 정체성 인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통일-독립 인식에서 통일과 독립을 지지하면서도 현상유지를 선택한 응답을 합하면 약 90%의 대만인이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 특히 '통일 지지하나 현상 유지 선호', '현상유지 및 추후 결정', '무기한 현상 유지', '독립 지지하나 현상 유지 선호' 중 '무기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대만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볼 때, 대만인은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독립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급진적 독립노선으로 중국의 견제와 압박이 커지거나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양안 간 경제교류도 이와 비슷하다. 민진당은 대만의 과도한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때문에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대만인 인식 조사에 의하면, 민진당 시기 양안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대만인은 오히려 양안 경제교류가 느리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대만인 정체성이나 통독 논쟁에서 현실 문제 해결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민진당과 국민당이 중국과의 관계에 매몰한다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민진당이나 국민당은 양당 구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양안 갈등에 대한 피로도와 산적한 민생 문제 앞에서 어떻게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진당과 국민당은 양안관계, 즉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진당은 대만인 정체성의 확산을 계기로 탈중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비록 민진당은 중국에 비해 열세인 대만 국력을 고려해 독립노선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편승하고 우호국과의 전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반면, 국민당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와 중국과의 경제 및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민진당 양안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각 정당의 양안 정책은 대만 문제에 대한 대만 대중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진당과 국민당이 대만 대중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양안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호 대립적인 양안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정당과 대만 대중 간 인식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1월 총통 선거에서 나타난 민중당의 우세는 이러한 인식 괴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만인 인식 조사 결과를 볼 때, 대만인 정체성은 향후에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만해협의 현상유지와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이다. 물론, 선거에서 양안관계 외에도 여러 이슈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인 인식 조사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민진당과 국민당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대만인 정체성 문제에서는 민진당이, 대만해협 현상유지와 중국과의 경제교류에서는 국민당이 대만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과의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는 국민당은 대만인의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민진당은 중국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경제성장의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지지층을 끌고 가기 위한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느 정당이든 대만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만 정당의 양안 정책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중국 대만 정책의 이원화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이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을 통해서 중국-대만 간 평화통일 방침을 제기한 후, 중국은 표면적으로 ‘일국양제’를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하

고 있다.⁷⁸ 그러나 민진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시진핑 정부는 대만에 대한 경제·외교·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은 2019년 1월 2일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필요 수단을 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⁷⁹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대만과의 통일은 군사적 침공을 감수하면서까지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만과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⁸⁰

그러나 중국 군사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현 상황에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동부가 절벽 지역인 지리적 특성상 상륙 가능 지역이 제한적이고, 대형 강습 상륙함이 부족해 미국의 군사 개입 전에 대규모의 군대를 대만에 보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만 침공이 실패한다면, 이는 대만과의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하며 자신의 3연임 집권을 정당화한 시진핑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동시에 대만 침공은 ‘책임 있는 대국’을 주장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국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와 압박에 명분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중국 내 급격한 정치변동이 발생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독립이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단기간에 대만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78. 시진핑 역시 집권 1기인 2015년 시진핑-마잉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만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79. “習近平：在《告臺灣同胞書》發表40周年紀念會上的講話”，中國共產黨新聞網, 2019.01.02.

80. 대만 국방장관 추이귀정(邱國正)은 중국의 대만 침공 비용이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2025년 이후 중국은 전면적인 침공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ina could mount full-scale invasion by 2025, Taiwan defence minister says,” *The Guardian*, 2021.10.0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oct/06/biden-says-he-and-chinas-xi-have-agreed-to-abide-by-taiwan-agreement>; 또한, 2021년 3월 미의회 청문회에서 필립 데이비슨(Philip Davidson) 당시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6년 이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 CIA 국장도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면 중국이 대만 침공을 우려했다. “China could invade Taiwan in next six years, top US admiral warns,” *The Guardian*, 2021.03.1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r/10/china-could-invade-taiwan-in-next-six-years-top-us-admiral-warns>, “CIA국장 ‘시진핑,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지시’”, *조선일보*, 2022.10.0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2/10/06/OIU52ZIK7FG6PAD55UJNIOVHSI/>.

오히려 대만인 인식 결과는 중국이 정당과 대만 대중 간의 인식 괴리를 활용해 대만에 대한 정책을 이원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즉, 대만 독립노선을 취하는 민진당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당 및 대만인에 대한 회유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민진당을 ‘분리주의자’ 세력으로 간주하고 대화를 거부해 왔다. 2024년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과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등하게 교류하겠다”면서 교류 재개의 의지를 밝혔지만,⁸¹ 중국은 민진당 정부와 어떠한 대화와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⁸² 동시에 중국은 라이칭더 정부가 취임한 이후 대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2021년 대만 농산물 수입 및 대만 관광 금지 조치에 이어 2024년 5월 중국은 대만의 134개 대만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을 중단했다. 동시에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시위를 빈번하게 시행하는 한편, 2024년 6월에 대만 독립분자를 최대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지침을 발표하고 대만 관광객을 구금하고 대만 어선 ‘다진만 88’호를 나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민진당의 독립노선이 양안관계를 악화하고 있으며 민진당에게 양안관계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대만인에게 심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국민당과는 우호적 관계를 과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4월 초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과 4월 10일 시진핑-마잉주 회담이었다. 중국은 이를 통해서 92 컨센스를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마잉주 및 ‘대구학당(大九學堂)’⁸³ 학생들의 쑨원 고택, 중산릉(中山陵: 쑨원 능묘) 등 국민당 유적지 방문과 성모 활동을 통해서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뿌리임을 홍보했다. 이는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가족이다(兩岸一家親)”는 시진핑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중국은 이와 같은 교류 활동을 통해서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며 민진당이 아니라 국민당이 양안관계의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은 이미 홍콩을 통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 내에서는 ‘홍콩인 정체성’⁸⁴의 확산과 함께 민주화와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것이 2003년 보안법 시위, 2014년 우산 시위,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등 대규모 시위로 표출됐다. 그

81. “賴清德：盼與中國交友 對等尊嚴下冷靜交流”，臺灣中央通訊社，2023.11.10.，<https://www.cna.com.tw/news/aip/202311100244.aspx>.

82. 中國國務院臺灣工作辦公室，“國臺辦：賴清德鼓噪‘臺獨’只會給臺灣帶來兵兇戰危”，2023.08.15.，http://www.gwytb.gov.cn/m/fyrbt/202308/t20230815_12559489.htm.

83. 대구학당은 마잉주기금회가 운영하는 비정부 교육기관으로 젊은 층의 정치 참여와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는 목표 하에 ‘중화민국’ 국가 정체성을 교육하고 있다.

러나 이런 정치활동은 홍콩 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동력을 상실했다. 민주화보다 경제 문제 등 현실적 요구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⁸⁵ 홍콩 내에서 홍콩인 정체성은 계속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胡錦濤) 시기 이후 홍콩 지역구 직선제 선거에서 민주 정당보다 친중 정당이 우세한 현상이 나타났다. 홍콩인들이 감정적으로는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중국의 통치를 수용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는 친중 정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나 정치사상 교육의 영향도 있었지만, 중국의 경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홍콩인들이 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중국의 통치를 암묵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홍콩 사례를 고려할 때,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대만인 정체성이 높아지더라도 대만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높이고 대만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대만을 통합할 기회가 생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대만과 통일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고 공언한 시기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이다. 아직 25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 중국은 이 기간에 최대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민당의 재집권을 지원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대만해협의 현상유지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선호하는 대만인 여론을 고려해 양안관계 악화의 책임이 민진당에 있음을 부각하는 한편, 국민당을 통해서 언제든지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대만 내 여론을 분열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예전부터 대만 정부기관 해킹 등의 사이버전과 대만 내 반중 정서를 희석시키기 위한 가짜뉴스 배포 등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도 병행해 왔다.⁸⁶ 중국은 민진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확산하고 국민당에게 유

84. 1980년대 중국 이주민이 홍콩 내에 늘어나면서 후진적 중국인에 비해 홍콩인이 우월하고 선진적이라는 인식에 형성된 홍콩인 정체성은 중국과의 통합 이후 중국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장정아, <타자의 의미: ‘홍콩인’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 《한국문화인류학》 제36권: 제1호, 2003 혹은 장정아, <우리의 기억, 우리의 도시: 집단기억과 홍콩 정체성>, 《동북아문화연구》 제17집, 2008을 참고.

85. 2014년 우산 시위 이후 민주화보다 현실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예를 들어, 2015년 현실 불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주택, 물가, 대륙 관광객 문제가 상위를 차지한 반면, 홍콩의 민주화는 문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One in three young adults dissatisfied with Hong Kong society,” *South China Morning Post*, 2015.04.13., <https://www.scmp.com/news/hong-kong/social-issues/article/1765410/one-three-hong-kong-youths-dissatisfied-society>.

86. 대만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중국은 적어도 10개의 대만 정부 기관과 6천 개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왔다. Lindsay Maizland, “Why China-Taiwan Relations Are So Tens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1.05.10., <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taiwan-relations-tension-us-policy>.

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경제적 압박 외에도 지속적으로 대만 내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V. 정책 제언

1980년대 대만 민주화 이후 대만인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는 대만인의 반중 정서와 중국 위협 인식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2024년 1월 총통 선거 결과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3연속 집권에 성공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인해서 대만해협 유사 사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만인 인식 조사는 대만인 정체성과 함께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 정당의 양안 정책이 대만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현재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민진당이 대만 내 대중 불신과 중국 위협 인식을 기반으로 집권했지만, 대만해협의 안정, 혹은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나 이슈가 확산되었을 때 국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진당이나 국민당이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양안 정책을 조정해 나가면서 양안관계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변화할 여지도 있다.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중국은 대만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민진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인에 대한 회유 및 심리전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대만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중국의 대만 정책을 관찰하는 동시에 대만 내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대리전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안 정책은 상호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만 문제에 대한 대만인의 인식은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안 정책과 입장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도 지지층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에서 양안 정책이 조정된다면, 민진당이 미국을, 국민당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정책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민진당이 경제성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한적이거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주장하며 중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대만 문제는 미국, 중국, 대만 3각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다. 상술했듯이, 2024년 총통 및 입법원 선거에서 대만 내 정치구도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났다. 그런 만큼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정책 뿐 아니라 대만 내부의 변화와 향후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민진당 및 국민당과의 비공식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대만 간 학술 교류를 격려해야 한다.

둘째, 대만인 인식과 대만 정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세우고 이를 전달해야 한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대립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 문제가 한국의 국익과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대만해협과 관련된 발언만 해도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를 대만해협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대만도 이에 편승해 대만해협 유사 사태 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요한 해상교통로인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을 야기해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점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현상유지와 양안 경제교류를 선호하는 대만인 인식의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고 강조할 때 이러한 대만인 인식을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거나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중국의 반발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 과정에서도 이러한 대만인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보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부각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에 집중시켜야 한다.

셋째, 중국의 대대만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에 대한 중국의 회유와 강압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작전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사드 사태와 COVID-19 팬데믹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경제 및 인문 교류, 국내 정치의 분열, 영향력 작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러한 작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대만 정치권과 대중의 인식은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중국은 민진당과 국민당의 분열을 이용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친중 정당이 유리하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경제·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며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경기 하강의 책임을 독립노선의 민중당에게 돌리고 있다. 대만 내 인터넷과 언론을 활용해 민진당에 대한 불만을 유도하고 중국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양안관계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작전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작전에 대비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준영, “대만 대선 결과... 친미 vs 친중 구도에 휘말리지 말자”, 아주경제, 2024.01.14., <https://www.ajunews.com/view/20240114133908099>.
- 국민호,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딜레마>, 《현상과 인식》 제39권:3호, 2015.
- 김민환·정현욱,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과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 《아태연구》 제21권:3호, 2014.
- 김범수 외,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 김원근, <후진타오 체제의 대만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중국학논총》 제25호, 2008.
- 김원근, <마잉지우(馬英九) 再選이후 兩岸關係의 變化에 대한 展望>, 《중국학논총》 제36호, 2012.
- 김윤태, <‘중화 민족주의’ 강요와 ‘대만 정체성’의 형성>, 《동아인문학》 제64집, 2023.
- 김중섭, <리덩후이와 중화민국의 대만화 -헌법 수정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49권, 2010.
- “대만, 美무기판매 환영.. 계속 구매”, 연합뉴스, 2010.01.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099550?sid=104>.
- 문홍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지속>, 《동아연구》 53권, 2007.
- 문홍호, <2012년 대만 대선과 마잉주 정부의 대내외정책 전망>, 《국방연구》 제55권:1호, 2012.
- “미국,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중국 ‘민감하고 해롭다’ 반발(종합)”, 연합뉴스, 2015.12.17., <https://www.yna.co.kr/view/AKR20151217032751009?input=1195m>.
- 박상현, <미국의 지역적 거대전략과 ‘대만문제’의 역사적 변화>, 《경제와 사회》 제133호, 2022.
- 신상진,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관계의 변화: ‘평화발전’에서 ‘평화통일’로의 이행>, 《중소연구》 43권:3호, 2019.
- 위홍위·강준영, <차이잉원 정부 집권 1기의 대만주체의식과 양안 현황>, 《대만연구》 제15-16호, 2020.
- 윤근노, <중국 대만 관계: 양안 ECFA의 정치경제적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2013-34), 2013.11.21.
- 윤상우,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의 대만의 대응과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제26

- 권:2호, 2010.
- 이광수, 〈중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만인의 인식〉, 《지식융합연구》 5권:2호, 2022.
- 이동규, 〈미중 전략경쟁 시기 대만문제의 쟁점과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1.11.25.
- 이수행·정상은, 〈1990년대 이후 대만경제의 침체 요인에 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8권:3호, 2010.
- 이왕휘·박성빈, 〈대만의 경제안보: 신남향정책과 반도체 사업〉, 《국제지역연구》 32권:3호, 2023.
- 이혁구, 〈한국과 대만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비교〉, 《비교경제연구》 제26권:2호, 2019.
- 임규섭, 〈민주화 이후 대만민족주의 변동 및 추이〉, 《대만연구》 21호, 2022.
- 임규섭, 〈대만에서 역사교육과 국가정체성의 관계: 청년세대의 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6권:1호, 2023.
- 장정아, 〈타자의 의미: ‘홍콩인’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 《한국문화인류학》 제36권:1호, 2003.
- 장정아, 〈우리의 기억, 우리의 도시: 집단기억과 홍콩 정체성〉, 《동북아문화연구》 제17집, 2008.
- 조준현, 〈ECFA협정 체결 이후 양안 경제관계의 변화와 대만경제〉, 《대만연구》 제 9호, 2016.
- 지만수·이승신·여지나,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07.22.
- 지은주, 〈정체성과 경제적 이익의 동학: 2008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46권:1호, 2012.
- 지은주, 《또 다른 중화, 대만: 대만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연구》, 파주: 김영사, 2015.
- 지은주, 〈대만 2023: 상존하는 양안 위기와 2024년 총통 선거의 준비〉, 《아세아연구》 67권:1호, 2024.
- 허석재·김진용, 〈정체성 정치의 변화와 지속: 대만 천수이볜 시대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66호, 2014.
- CIA국장 “시진핑,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지시”, 조선일보, 2022.10.0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2/10/06/OIU52ZIK7FG6PAD55UJNIOVHSI/>.
- Chia-lung Lin, “The political formation of Taiwanese nationalism,” in Corcuff, ed., *Memories of the Future*, 2002.
- “China could invade Taiwan in next six years, toe US admiral warns,” *The*

Guardian, March 10, 202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r/10/china-could-invade-taiwan-in-next-six-years-top-us-admiral-warns>.

“China could mount full-scale invasion by 2025, Taiwan defence minister says,” *The Guardian*, October 6, 202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oct/06/biden-says-he-and-chinas-xi-have-agreed-to-abide-by-taiwan-agreement>.

“China needs to show Taiwan respect, says president,” *BBC*, January 15, 2020., <https://www.bbc.com/news/world-asia-51104246>.

Christine Huang and Kelsey Jo Starr, “Most people in Taiwan see themselves as primarily Taiwanese; few say they’re primarily Chinese,” *Pew Research Center*, January 16, 2024.,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4/01/16/most-people-in-taiwan-see-themselves-as-primarily-taiwanese-few-say-theyre-primarily-chinese/>.

Election Study Center, “Taiwanese-Chinese identity,”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July 8, 2024., <https://esc.nccu.edu.tw/PageDoc/Detail?fid=7800&id=6961>.

Election Study Center, “Taiwanese-Chinese identity,”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July 8, 2024., <https://esc.nccu.edu.tw/PageDoc/Detail?fid=7801&id=6963>.

Election Study Center, “Taiwanese-Chinese identity,”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July 8, 2024., <https://esc.nccu.edu.tw/PageDoc/Detail?fid=7802&id=6964>.

Eric Cheung, “As election nears in Taiwan, many young voters say China isn’t their biggest concern,” *CNN*, January 10, 2024., <https://edition.cnn.com/2024/01/10/asia/taiwan-election-young-voters-china-intl-hnk/index.html>.

Ho-Chun Herbert Chang, and Sunny Fang, “Identity Collapse? Realignment of Taiwanese Voters in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s on Social Media,” *Computers and Society*, October 10, 2023., <https://arxiv.org/abs/2310.07739>.

Howard Shen, “Taiwan’s Surprising Drop in Trade Dependence on Mainland

- China,” *The Diplomat*, March 8, 2024., <https://thediplomat.com/2024/03/taiwans-surprising-drop-in-trade-dependence-on-mainland-china/>.
- Kathrin Hille, “Becoming Taiwan: in China’s shadow, an island asserts its identity,” *Financial Times*, January 5, 2024., <https://www.ft.com/content/6e9a0243-87f2-445e-b563-e8f67082b3da>.
- Lindsay Maizland, “Why China-Taiwan Relations Are So Tens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0, 2021., <https://www.cfr.org/backgrounders/china-taiwan-relations-tension-us-policy>.
- Mainland Affairs Council, “Public’s view on current Cross-strait relations,” *Mainland Affairs Council*, December 5, 2024., <https://www.mac.gov.tw/en/cp.aspx?n=7356E62A20738207>.
- “One in three young adults dissatisfied with Hong Kong society,” *SCMP*, April 13, 2015., <https://www.scmp.com/news/hong-kong/social-issues/article/1765410/one-three-hong-kong-youths-dissatisfied-society>.
- Simina Mistreanu, and Johnson Lai, “A non-traditional candidate resonates with Taiwan’s youth ahead of Saturday’s presidential election,” *AP*, January 12, 2024., <https://apnews.com/article/taiwan-youth-ko-lai-hou-de6685d9addf7815703250e7245ec9e5>.
- Yang Zhong, “Explaining national identity shift in Taiwa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5:99, 2016.
- Zhuoran Li, “The Evolution of Identity in Taiwan,” *The Diplomat*, December 25, 2023., <https://thediplomat.com/2023/12/the-evolution-of-identity-in-taiwan/>.
- “大陸政策與工作 民國95年”, 中華民國大陸委員會., https://www.mac.gov.tw/News_Content.aspx?n=4ACFA38B877F185F&sms=35FA2C4073CF4DFB&s=7C7EDCC652BD09B8.
- 黃天麟, “兩國三通”, 台灣獨立建國聯盟, 2003.03., <https://wufi.org.tw/%E5%85%A9%E5%9C%8B%E4%B8%89%E9%80%9A>.
- “賴清德：盼與中國交友 對等尊嚴下冷靜交流”, 臺灣中央通訊社, 2023.11.10., <https://www.cna.com.tw/news/aipl/202311100244.aspx>.
- “藍綠消長 民進黨68席取得國會過半”, 立法院, 2016.01.18., <https://www.ly.gov.tw/Pages/Detail.aspx?nodeid=4989&pid=30924>.

- “兩岸交流大事紀”，民國九十一年年報 行政院大陸委員會，<https://www.mac.gov.tw/cp.aspx?n=A79618AB3680715C>.
- 林瑞榮，〈我國鄉土教育沿革與發展趨勢〉，《教育資料與研究》第105期，2012。
- 台灣課綱的歷史演變”，新華澳報，2017.12.11.，<https://www.waou.com.mo/2017/12/11/%E5%8F%B0%E7%81%A3%E8%AA%B2%E7%B6%B1%E7%9A%84%E6%AD%B7%E5%8F%B2%E6%BC%94%E8%AE%8A/>.
- 習近平，“在《告臺灣同胞書》發表40周年紀念會上的講話”，中國共產黨新聞網，2019.01.02.，<http://cpc.people.com.cn/BIG5/n1/2019/0102/c64094-30499664.html>.
- 詹中原，“新中間路線是突破兩岸僵局的政策指導綱領嗎？”，國家政策研究基金會，2007.02.06.，<https://www.npf.org.tw/1/786>.
- 中國國務院臺灣工作辦公室，“國臺辦：賴清德鼓噪‘臺獨’只會給臺灣帶來兵兇戰危”，2023.08.15.，http://www.gwytb.gov.cn/m/fyrbt/202308/t20230815_12559489.htm.
- “中華民國第十任總統、副總統就職慶祝大會”，中華民國總統府，2000.05.20.，<https://www.president.gov.tw/NEWS/6742>.
- “中華民國第12任總統馬英九先生就職演說”，中華民國總統府，2008.05.20.，<https://www.president.gov.tw/NEWS/12226>.
- “中華民國第14任總統蔡英文女士就職演說”，大陸委員會，2016.05.20.，https://www.mac.gov.tw/News_Content.aspx?n=106241E966C563C0&sms=949FB8518BAC220E&s=995E17A883743E06.
- “2000—第10任總統副總統選舉”，中央選舉委員會 選舉及公投資料庫，<https://db.cec.gov.tw/ElecTable/Election/ElecTickets?dataType=tickets&typeId=ELC&subjectId=P0&legisId=00&themeId=bc69efc4ab84479137e749aac2078116&dataLevel=N&prvCode=00&cityCode=000&areaCode=00&deptCode=000&liCode=0000>.
- “2016—第14任總統副總統選舉”，中央選舉委員會 選舉及公投資料庫，<https://db.cec.gov.tw/ElecTable/Election/ElecTickets?dataType=tickets&typeId=ELC&subjectId=P0&legisId=00&themeId=61b4dda0ebac3332203ef3729a9a0ada&dataLevel=N&prvCode=00&cityCode=000&areaCode=00&deptCode=000&liCode=0000>.

ASAN
REPORT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과 그 함의

발행일 2025년 3월

지은이 이동규, 강충구, 김지연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Copyright © 2025 b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SBN 979-11-5570-302-1 95340 (PDF)



ISBN 979-11-5570-302-1